

조세 · 재정 BRIEF

kipf 한국조세연구원

2012. 1. 12(목)

2011년 세계 조세 · 재정 현황

요 약

1. 선진국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

- '11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및 미국의 재정정책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
 - 유럽 PIIGS 국가*를 중심으로 한 유럽 재정위기가 주변국으로 전이될 위험 지속
 - * 포르투갈, 이탈리아, 아일랜드, 그리스, 스페인
 - 미국 지난 8월 부채협상* 및 S&P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미국, 유럽, 아시아 주식시장 폭락
 - * 부채상한선 조정과 함께 대폭적인 지출삭감을 결정하여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확대
- '11년 세계경제는 하방리스크 증가
 - 선진국 미국의 내수회복 지연과 유로지역의 국가채무 및 금융시장 불안 정도가 당초 예상보다 심화
 - 신흥국 경제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선진국 경기둔화 영향으로 불확실성 증가

2011년 주요국 경제 및 재정전망

	한국	미국	유로지역	일본	중국
실질 GDP 성장률 ¹⁾	3.7	1.7	1.6	△0.3	9.5
재정수지 ²⁾	0.8	△10.0	△4.0	△8.9	△1.6
국가채무 ²⁾	35.5	97.6	95.6	211.7	26.9

주: 1) 전년 대비 증가율, %

2) GDP 대비 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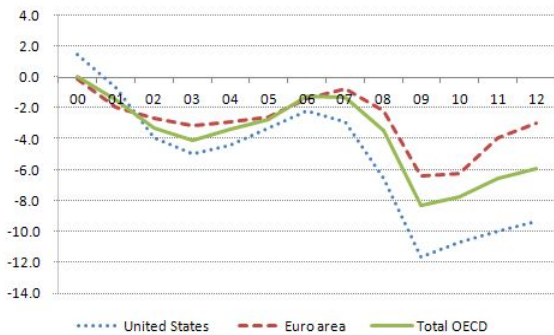
자료: OECD Economic Outlook 90(2011. 11월), 단, 중국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(2011. 9월)

2. 글로벌 재정위험 증가 및 대응책

-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·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한 결과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
 - 이에 따라, 지출축소 및 세입증대를 통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, 세액공제와 같은 경기부양 조치도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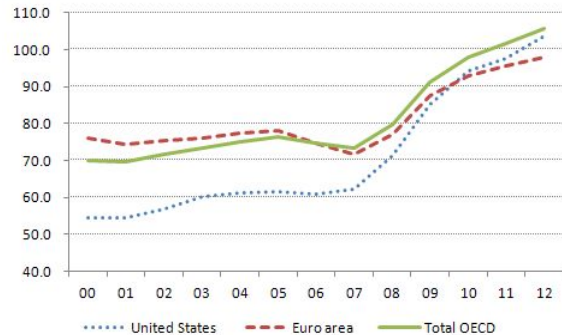
- PIIGS 국가를 비롯하여 프랑스, 미국, 영국 등 주요국에서 재정 긴축정책 수립 · 추진

재정수지(GDP 대비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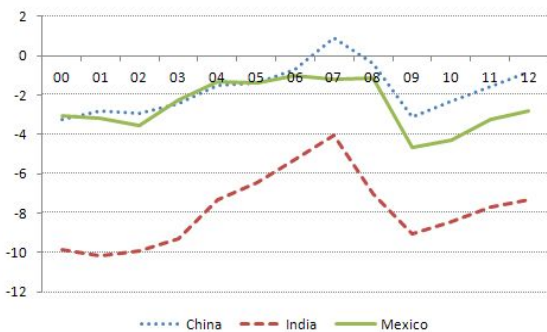
자료: OECD Economic Outlook 90(2011. 11월)

국가채무(GDP 대비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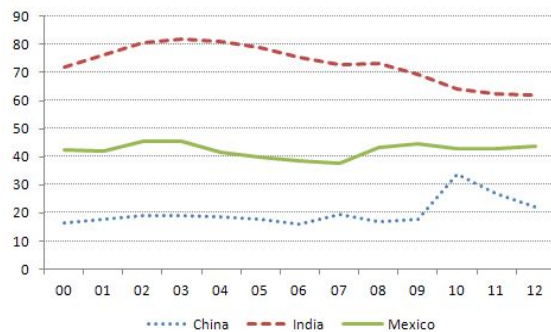
-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재정상태는 건전하나, 선진국발 경기요인의 영향에 앞서 재정 펀더멘털을 강화할 필요성 대두

재정수지(GDP 대비 %)



자료: IMF World Economic Outlook(2011. 9월)

국가채무(GDP 대비 %)



I 유럽

- '10년부터 EU 회원국은 그간의 확장적 재정정책에서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조세·재정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별 재정상황에 따라 재정건전화 정책의 규모나 방식 등은 상이
- 그리스 '11년 2차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추가 긴축정책 마련
 - 3만명 규모의 공무원 비정규직 전환과 급여 40% 삭감, 공기업 및 은행 퇴직자 연금 15% 삭감 등 공공부문과 연금개혁 포함
- 이탈리아 '11년 한 해 동안 세 번의 재정긴축안 마련
 - 7월 의회가 480억유로의 재정긴축안을 승인한 데 이어, 9월 '13년까지 균형재정을 목표로 540억 유로 긴축안 가결, 12월 300억유로의 긴축안 승인
 - 12월 재정긴축안은 연금 개혁과 주민세 등 조세 강화, 세금탈루 추적 강화 등의 내용 포함
- 프랑스 8월 및 11월 두 차례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 발표
 - 8월 감축안 : '11~'12년간 부유층 증세 및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120억유로의 재정적자 감축
 - 11월 감축안 : '12~'16년 동안 총 647억유로의 재정적자를 감축하여 '16년 균형재정 달성
- 독일 '14년까지 800억유로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 마련
 - '10.6월 은행세 및 항공세 신설, 에너지산업에 대한 세금감면 폐지, 국방분야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세수 증대 및 지출 감축 방안 발표

2011년 유럽 주요국 일반정부 재정전망

	그리스	이탈리아	프랑스	독일	영국	스페인	아일랜드	포르투갈
재정수지 ¹⁾	△9.0	△3.6	△5.7	△1.2	△9.4	△6.2	△10.3	△5.9
(전년 대비) ²⁾	(1.7)	(1.0)	(1.4)	(3.1)	(1.0)	(3.2)	(21.0)	(3.9)
국가채무 ¹⁾	165.1	127.7	98.6	86.9	90.0	74.1	112.6	111.9
(전년 대비) ²⁾	(16.0)	(1.6)	(3.4)	(△0.2)	(7.8)	(7.1)	(14.1)	(8.4)

주: 1) GDP 대비 %
 2) 전년 대비 증감, %p.

자료: OECD Economic Outlook 90(2011. 11월)

- '11년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던 유럽국가 다수가 재정 정상화를 위

4 2011년 세계 조세 · 재정 현황

해 세수확대 정책 시행

○ 다만,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액공제 조치도 함께 시행하는 경우 존재

*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1. “2011년 주요국 재정상황별 조세정책 - 유럽” 참조

2011년 유럽 주요국 조세정책

국가	조세정책		세수 효과
	세목	주요 내용	
프랑스	소득세	최고세율 신설(44, 45% 추가 신설)	+
		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	+
		배당소득세액공제제도 폐지	+
	자본이득세	세율 인상	+
	은행세	도입	+
	상속증여세	세율 인상	(+)
그리스	소득세	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	-
	법인세	세율 인하(24→20%)	-
	부가가치세	세율 인상(19→23%)	+
	주식양도세	세율 인상	+
	연대세	연대세(solidarity levy) 부과	+
	재산세	한시적 부과	+
아일랜드	소득세	과표구간 하향조정	+
		일부 공제항목 폐지	+
	부가가치세	세율 인상(21→23%)	(+)
	연금기금세	부과	+
이탈리아	소득세	최고세율 신설(46% 추가신설)	+
		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단일세율로 인상	+
	부가가치세	세율 인상(20→21%)	+
	여행자세	여행자세(tourist tax) 도입	(+)
포르투갈	소득세	공제 축소	+
	법인세	공제 축소	+
	부가가치세	세율 인상(20→23%)	+
스페인	소득세	최고세율 신설(44, 45% 추가신설)	+
	법인세	중간예납세율 인상	+
		세액공제혜택 연장 및 확대	-
	부가가치세	세율 인상(16→18%)	+
	게임세	부과	+
영국	소득세	과표구간 확대	-
	법인세	세율 인하(28→26%)	-
	부가가치세	세율 인상(17.5→20%)	+

주: (-)는 논의중인 상태이며, (+)는 세수증대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짐을 의미

II 미 주

- 미국의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에서 재정건전화로 돌아섰으며, 자원 수출국인 멕시코와 칠레는 비교적 건전한 재정 유지
 - **미국**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던 미국은 지출축소를 통해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
 - **캐나다**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연방정부 균형재정 목표 1년 연장
 - **멕시코** '10년부터 시작한 재정건전화 정책과 안정적인 석유관련 수입으로 건전 재정 유지
 - **칠레** 견조한 경제성장 및 구리가격 상승과 더불어 정부지출 축소와 세금 인상을 통해 중앙정부 흑자재정 달성

- 미주 주요국의 조세정책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세목별 정책이 상이하게 추진
 - *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2. “2011년 주요국 재정상황별 조세정책 - 아메리카” 참조

2011년 미주 주요국 조세정책

국가	조세정책		세수 효과
	세목	주요 내용	
미국	소득세	한시적 개인소득세율 인하 연장	-
		한시적 사회보장세 인하(6.2→4.2%)	-
		고소득층 감세혜택 종료	(+)
	법인세	소기업 세금감면 확대	(-)
	금융위기책입세	도입 제안	(+)
캐나다	소득세	세액공제 항목신설 및 확대	(-)
	법인세	세율 인하(18→16.5%)	-
		세액공제 항목신설 및 확대	(-)
멕시코	소득세	세율 인하	-
칠레	소득세	최저세율 인상(0→5%)	+
		최저세율 제외한 나머지세율 인하	-
	법인세	세율 인상(17→20%)	+

주: (-)는 논의중인 상태이며, (+)는 세수증대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짐을 의미

III 아시아 · 오세아니아

-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주요국의 재정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긴축 시행
 - **일본** 8월 FY2015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FY2020까지 흑자달성 및 국가채무 비율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중기재정계획(3년) 발표
 - **호주** 비교적 건전한 재정상태인 호주는 '09년부터 출구전략을 시행하였으며, FY2012~13까지 재정수지 흑자 회복 목표
 - **중국** 양호한 재정상황이나 중국 정부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구간 축소,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 세율 인하 계획은 재정적자를 증가시킬 우려
 - **인도** '10~'11년 중앙정부 재정적자 감소에 진전을 이루었으나, 인플레이 압력 해소를 위해 정부 지출 관리를 통한 재정적자 축소에 박차를 가할 필요

-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세율 인하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세입증대 방안 논의중

*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3. “2011년 주요국 재정상황별 조세정책 -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”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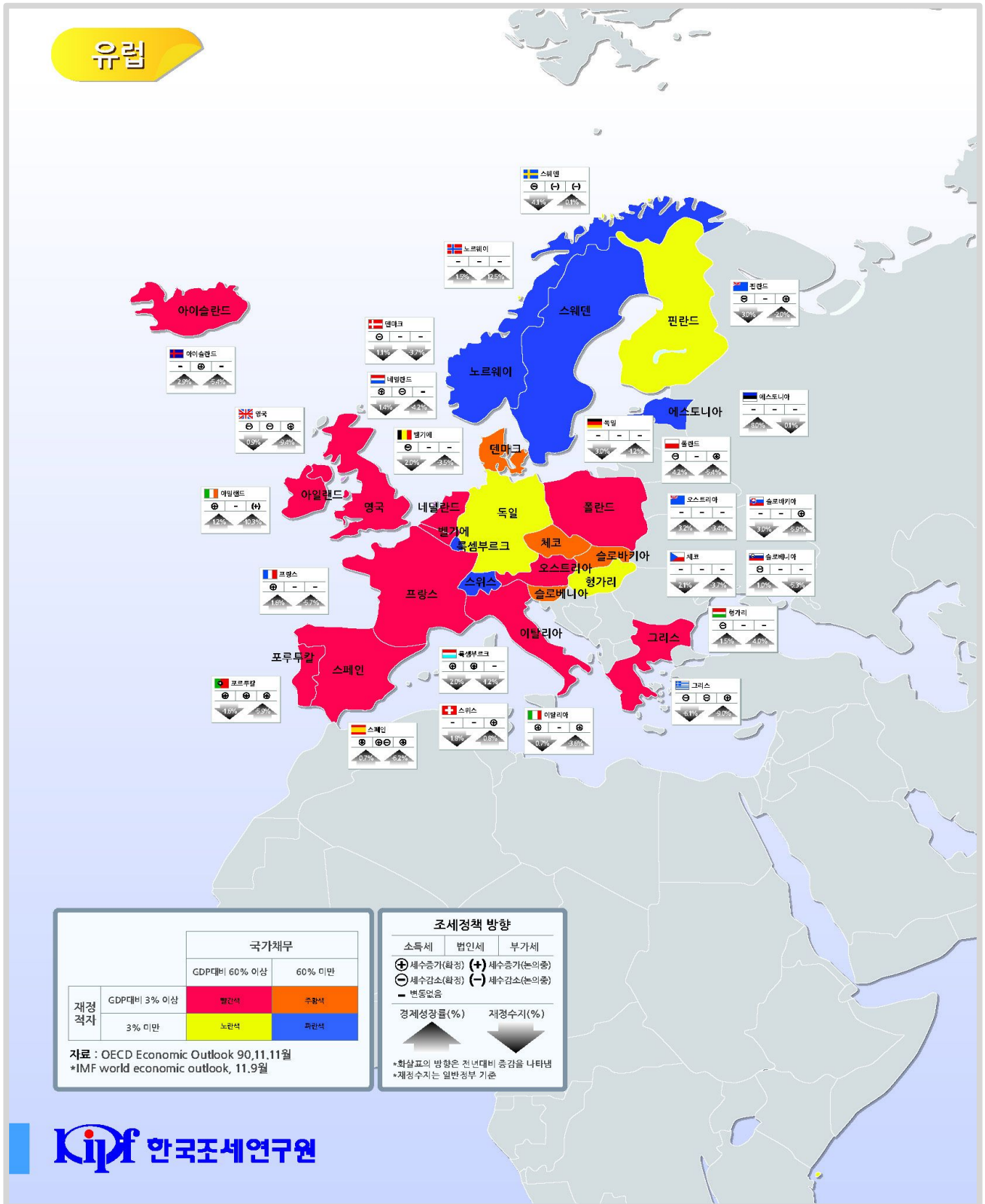
2011년 아시아 · 오세아니아 주요국 조세정책

국가	조세정책		세수 효과
	세목	주요 내용	
일본	부가가치세	인상 논의중	(+)
호주	소득세	중간소득세율 인하(38→37%)	-
홍콩	소득세	근로소득공제액 인상	(-)
	특별인지세, 담배세, 최초차량등록세	인상	(+)
대만	특정물품 및 용역세	투기적 부동산거래 및 사치품에 부과	(+)
중국	소득세	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구간 축소	(-)
		최저과세구간 세율 인하	(-)
	재산세	거주용 건물에 대해 부과	(+)

주: ()는 논의중인 상태이며, (+)는 세수증대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짐을 의미

작성자 : **박명호** 한국조세연구원 거시재정팀장(02-2186-2258)

붙임자료 1. “2011년 주요국 재정상황별 조세정책 - 유럽”



붙임자료 2. “2011년 주요국 재정상황별 조세정책 - 아메리카”

아메리카



		국가채무	
		GDP대비 60% 이상	60% 미만
재정 격차	GDP대비 3% 이상	빨간색	주황색
	3% 미만	노란색	파란색

자료 : OECD Economic Outlook 90,11.11월
*IMF world economic outlook, 11.9월

조세정책 방향			
소득세	법인세	부가세	
⊕	⊕	⊕	⊕
⊖	⊖	⊖	⊖
—	—	—	—
경제성장률(%)		재정수지(%)	
▲		▼	

*화살표의 방향은 전년 대비 증감을 나타냄
*재정수지는 일반정부 기준

붙임자료 3. “2011년 주요국 재정상황별 조세정책 -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”

